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7.11.대림동-신길동 극우 혐오 선동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제 목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종식!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날 짜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총 5매; 취재요청서 및 언론보도 가이드 제안)

문의 010-8717-2561 홍명교
platformc@proton.me

취재요청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극우세력 일부, 서울 자양동·대구 남일동 혐오시위에 이어 대림동 집회 예고…
지역주민 및 한국 시민사회, “혐오선동 극우세력 반대” 기자회견 열어

1. 오는 7월 11일(금) 오후 7시, 서울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세력 일부의 혐오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림역 10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7월 9일 오전, 극우 혐오세력 일부가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30분 대림역 인근 뚜레주르 앞에서 집회를 열고, 8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보라매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3.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오선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어지럽히고,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일부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이어지던 혐오 선동은 급기야 화교초교 앞 “짱X, 북괴, 빨갱이는 꺼져라” 구호를 외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주민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4. 이에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지역주민, 이주민들과 노동조합/진보정당/사회단체들이 모여 준엄한 경고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7월 11일(목) 오후 7시 ~ 7시40분
- 장소 : 7호선 대림역(구로구청) 10번출구 앞
- 진행
 - 사회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발언1 : 김세광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회장)
 - 발언2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3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 발언4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후보)
 - 발언5 :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
 - 발언6 : 고갑호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 발언7 : 한채민 (대림동 재직 교사)
 - 발언8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9 :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 공동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총 48개 단체)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구로민중의집, 직접행동영등포당, 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플랫폼C,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사)학교너머더큰학교, 각색모임, 각색교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센터 친구,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국제민주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경기도당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팀엑스), 영등포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프렌즈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다산인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무지개행동, 아리아리 불꽃, 인권운동사랑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환, 인권연구소 창, 인권아카이브, 너머서울,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민달팽이유니온 (2025.7.10. 오후 3:30 기준)

[별첨]

7월 11일 대림동 ‘Yoon Again’ 집회를 다루는 언론에 요청합니다

-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을 살펴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11일(금) 저녁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예정된 ‘Yoon Again’ 집회는 특정 인종과 민족 집단, 특히 중국계 이주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타깃으로 한 혐오 표현과 인종차별적 선동을 수반할 것으로 강하게 우려됩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 집회는 단지 대림동 지역 이주민과 커뮤니티를 넘어서 한국사회 시민 전체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1. 인종차별과 혐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CCP OUT은 반중 인식과 정서를 강화하는 극우의 대표적인 선동 표현으로, 한국에서도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윤석열 옹호 및 부정선거 주장을 위해 반중 정서를 적극 동원·활용해 왔습니다. ‘Yoon Again’ 집회 장소를 대림동 일대로 설정한 것은 명백하게 중국계 이주민을 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집회에서는 ‘중국인 추방’, ‘조선족 몰아내자’ 등과 같이 국적·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혐오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혐오 표현은 한국이 가입해 있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며,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제20-22차 대한민국 심의에서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2. 지역 상권·이주민 사회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대림동 일대는 수십년간 중국동포 및 외국인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공존을 통해 형성된 상권입니다. 그러나 본 혐오 집회로 인해 상점 휴업, 고객 감소, 물리적 충돌 우려에 따른 영업 피해 발생, 이주민 주민의 외출 기피, 공포감, 심리적 불안 확대 등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려우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계 외국인과의 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큼니다.

3. 언론사에 드리는 요청: 인종차별적 보도를 피해주세요

- 특정 출신지역이나 국적, 민족, 인종을 불필요하게 부각하는 행위를 자제합니다.
- 윤어게인 집회 참가자들의 ‘중국인 범죄율 높다’, ‘조선족은 위험하다’ 등의 주장을 일반화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장 이주민 인터뷰 및 피해 당사자의 관점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취재를 합니다.

- 혐오는 맥락입니다. 차별 발언에 대한 개념과 맥락을 바탕에 둔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합니다.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1. 우리는 평소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적 토론의 장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적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3.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면서 확산되는 혐오의 흐름이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거나 “난민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등 사회적 소수자 때문에 다수 국민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 또는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탈북민이 재정을 거덜낸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역차별’로 매도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미디어 종사자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표출되는 현상 그 자체를 전달할 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한 뒤 전달해야 한다.

4. 우리는 연대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 다양한 국적과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대립동은 차별과 혐오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긴장과 혐오 확산에 맞서, 평등과 공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언론 또한 이에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끝.